



주간 통일정세

2013-2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해군부대 시찰…"함정 잘 숨겨라"**(5/2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군 제291군부대를 찾아 바닷가에 무질서하게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공기부양정)을 목격하고 "적들이 항시적으로 우리 군사대상물을 탐지하려고 하는데 맞게 군부대가 장비한 전투기술 기재(장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싸움준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산하 수산사업소 현지지도**(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달 초 수산사업소에 보내준 어선 4척을 어부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고 "좋은 고깃배를 갖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최전선 군인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줌으로써 당에서 마련해 준 고깃배가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어선의 조타실과 기관실, 선실 등을 둘러본 뒤 "군인들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그들에게 요구성도 높일 수 있다"며 "후방사업에 싸움준비 완성과 군기확립이 달려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철, 고위층 자제 모임 '봉화조' 수령 역할**(5/30,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周刊))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형인 김정철이 북한 고위층 자제 모임인 '봉화조'(烽火組)의 수령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의 순조로운 통치를 돕고 있다고 중국 준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운영하는 주간지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周刊) 전함.
 - 신문은 30일 "현재 32세인 김정철이 봉화조의 수령이 됐다"며 "봉화조는 앞으로 김정은의 통치과정에서 근위대(近衛隊)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국제공용어 안내판 세워라"**(5/31,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은 원산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와 청년아외극장을 현지지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야영하는 데 편리하게 국제공용어가 표기된 안내판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北 김정은, 동해안 유명 마전해수욕장 방문(6/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의 손꼽히는 해수욕장인 함경남도 마전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마전해수욕장을 찾아 샤워장, 안전감시대, 식당, '휴양각'(숙박시설) 등을 둘러본 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 수준으로 다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수용능력이 큰 현대적인 휴양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개건사업에 달려 붙어 다음해 여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함.

- **탈북고아 송환한 北 "김정은의 어린이사랑" 선전(종합)(6/1,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 전역에 방송되는 유일한 TV 채널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 어린이와 관련된 글이나 사진, 특집 프로그램 등에 많은 지면과 방송 시간을 할애해 국제아동절 분위기를 띄움.
 - 평양에 있는 경상유치원의 리강죽 원장은 이날 노동신문과 인터뷰에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원수님(김정은)의 사랑 속에 유치원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함.
 - 조선중앙TV는 새로 제작한 '미래를 꽃피우시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이틀 연속 내보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러 공개활동에서 어린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함.



■ **김정은동향**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현지지도(5.27, 중통·중방·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홍찬 동행 및 박승원(軍 상장) 등 현지 영접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해군 291군부대 시찰(5.27, 중방·평방)
 - 손철주·전창복·박정천·서홍찬 동행
- 5/28,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업소 현지지도(5.28,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리영길, 손철주, 럽철성, 전창복, 운동현, 조경철, 안지용, 김수길, 황병서 동행
- 5/31,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및 청년야외극장 현지지도(5.31, 중통·중방·평방)
 - 최휘(黨 제1부부장), 박태성·마원춘(黨 부부장들) 동행
- 6/1, 김정은 黨 제1비서, 마전해수욕장 및 인민軍 제1521호 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 현지지도(6.1, 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손철주, 최휘, 박태성,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요해(5.27,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의 생산실태와 석성탄광 개건정형 현지 요해(5.29, 중통·중방·평방)
- **【6.1 국제아동절】** 63돌 기념행사 등 동향
 - 친선연환모임, 6.1 만경대유회장에서 진행(6.1, 중통·중·평방)
 - 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김용진(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로성실(「여맹」위원장) 및 평양시내 어린이·여성들과 駐北 외교대표들·대사관 성원들과 어린이 등 참가
 - 리향·허준혁·류수연(평양대동문유치원·평양김마을1유치원) 등 어린이들, 김정은에게 '편지' 및 '김정은의 친필 답전' 소개(6.1, 중통)
 - 평양과 함흥시 등 전국 각지 탁아소·유치원들·유원지 등에서 어린이들의 체육유회오락경기·예술소품공연 진행 등 '명절분위기' 선전(6.1, 중통·중방)
 - 김정일·김정은 父子의 '어린이 사랑' 칭송 및 '국제아동절 제정意義' 등 소개(6.1, 중·평방/조국의 미래를 가꾸신 위대한 사랑·국제아동절)



나. 경제

● 北, 기업소 임금 재량권 확대(5/27, AP통신)

- 북한당국이 기업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고 AP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함.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업소들이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는 국가가 표준 임금을 결정해 기업소들이 일정액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개별 근로자들이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北 '온실 벗모' 확대...농업 과학화 시도(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질보장을 기술지도의 중심으로 틀어쥐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북도 운전군 협동농장이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다며 육묘 방법을 소개함.
- 신문은 운전군협동농장의 간부들이 온실에서 벗모를 기르는 방식을 중시하는 것은 실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올해 온실과 영양단지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새로운 방법을 적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밝힘.

● 북한, 농민에 잉여생산 처분권...인센티브 시행(6/1, AP통신)

- 북한이 올해 모내기 철부터 농민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일 함흥발로 보도함.
- AP통신에 따르면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에서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 조치가 지난 4월1일 발표되었는데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줄 급료를 정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 이바지한 이들에게는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는 내용이며 함흥 동봉협동농장의 김종진 농장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용, 올해에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북한, 상업·유통 부문 자율성 강화 추진(6/2, 연합뉴스; 조국)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2013년 6월호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내각 상업성의 오영민(43) 국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오 국장은 인터뷰에서 "상업성에서는 계획된 상품만 받아서 계획된 상업망들에만 넘기는 도매상업 기업소들의 운영 방식을 계획 상품은 물론 계획 초과분, 계획 외의 상품 등 모든 상품을 정보망을 통해 소개하고 임의의 소매망들로부터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운영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힘.
- 그는 "지금 우리 상업 부문들에서는 상업망들의 운영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



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사회·문화

- **북한 여자마라토너들, 압록강 국제마라톤대회 석권(5/27, 중국신문망)**
 -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26일 개최된 '2013 압록강 국제마라톤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여자부 풀코스 1~3위를 휩쓸었다고 중국신문망이 27일 전함.
 - 이번 대회에 총 12명의 선수를 파견한 북한은 홍춘미가 2시간 53분 14초의 성적으로 여자부 풀코스 우승을 차지했고 정은주와 백은경이 이 부문 2위, 3위를 기록함.

- **탁구세계선수권 우승 北선수 '금의환향'(5/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프랑스 파리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혼합복식조 김혁봉·김정이가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공항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리영수 당 부장, 리중무 체육상, 전용남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들이 직접 나가 이들을 맞이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200만명 돌파(5/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휴대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北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운동 소개(5/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에서 보건성, 상업성,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토론회가 열렸다고 31일 보도함.
 - 토론회에서는 금연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으며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됐다고 통신이 전함.

- **북한 소년단 7차대회 참석 지방 대표들 평양行(6/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소년단 7차 대회에 참가할 함경북도 대표들이 이날 열차로 청진시에서 출발했다며 "함경북도 당·정권기관 및 근로단체 책임 일꾼들과 청소년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들을) 환송했다"고 전함.
 - 평양방송도 양강도 소년단 대표들이 이날 특별열차로 양강도 해산시에서 출발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능라인민체육공원 및 평양국제축구학교 준공식, 5.30 현지에서 진행(5.30,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내각총리, 준공사), 최태복, 문경덕, 김인식(내각부총리), 리용수(黨부장), 리종무(체육상), 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

2. 대외관계

가. 일반

- **김정은 9월이전 방중 희망 피력...중국 확답안해(5/27, 뒤웨이)**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는 9월 이전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인터넷 매체 뒤웨이(多維)가 26일 보도함.
 - 뒤웨이는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했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때 전달한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며 중국 측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알았다"고만 말하고 김 제1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방중 시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확답을 하지 않음.
- **왕자루이, '北中은 일반적 국가관계'(5/27,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을 다녀온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우리 방중단에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말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방중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자루이 부장과 충칭시 당서기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중국 측 핵심인사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 "법, 인도주의 원칙 따라 탈북자 처리"(5/28, 연합뉴스)**
 - 라오스 정부가 한국행을 바라던 탈북 고아들을 중국에 추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구체적 방향 제시 대신 기존의 모호한 탈북자 처리 방침만 재차 확인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오스로부터 넘겨받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중국의 관련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우리는 한결같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북한)의 불법 입국자 문제를 처리한다"고 밝힘.
- **북, 정전협정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 참석 요청(5/29,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방중 당시 중국 최고지도부에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7월27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중국측이 즉답을 피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북수의 베이징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북측이 참석을 요청한 최고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가리킨다"며 "중국 매체는 최룡해가 방중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기념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를 참석시켜 한·미·일 등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식량 원조도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일본판 NSC 창설 시도 비난... "한반도 재침 야망"(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일본이 미국을 본떠 저들식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은 NSC를 내오려는 이유에 대해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갓 기만"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 당국이 NSC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논의하고 결정해 한반도 재침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며 일본의 NSC 창설 시도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함.
 - 이어 앞으로 일본판 NSC가 창설되면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모든 정책이 여기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 무력이 NSC의 결정으로 군사작전권을 발동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함.
 - **북한, 중국 단둥에 문화·상품홍보시설 마련 추진(5/29,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의 최대 교역 루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조선(북한)문화전파센터'를 설립하고 '조선전람총국 단둥상품전시기지'를 건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 대외전람총국 김일렬 부국장이 단둥에서 단둥시무역촉진회 린쉐웨이(林學瑋) 회장과 회담하고 관련 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힘.
 -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지난해와 비슷(5/29, 미국의 소리(VOA))**
 - 올해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집계한 자료를 인용, 올해 5월 28일 현재 세계 각국과 유엔 기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3천153만달러(약 357억원)로 작년 동기 3천26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함.
 - **중국 어선들, 북한과 뒤틀려 10년 넘게 이어져(5/29, 제노만보)**
 - 중국 어선들이 북한 측에 뒤틀을 주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이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10여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제노만보(齊魯晚報)가 29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동강(東港)의 어민들을 상대로 취재한 기사에서 '북한 경비정에 빌붙다'는 의미의 '방팅(幫艇)'이란 용어가 단둥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며 현지의 중국 회사 3곳이 일종의 보호비인 방팅비를 대신 받아 북한과 나눠 갖는다고 보도함.

● 북한, 대중 수입 감소...제재 영향(5/29,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통관 검색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에 나서면서 북한이 중국에서 각종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해관(세관) 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올해 1~4월 북한은 중국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8% 감소한 10억1천5만6천799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1~4월 기간 북한의 수입액이 감소한 것은 중국 세관 전산망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10년 이후 처음임.

● 일본 아베 총리 "김정은 납치 문제 결단하길"(5/29, 도쿄방송(TBS))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9일 저녁 민영방송인 T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납치는) 부친(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납치 행위와 관계가 없다"며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함.

● 일본, 국제기구 근무 북한인 방일 허용(5/30, 아사히신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남성이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 방일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함.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본부 이탈리아 로마) 소속의 북한 국적자 김충진씨는 6월1일부터 일본 요코하미(横浜)에서 열리는 제5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회의 참석차 29일 일본에 입국함.

● 獨 민간단체, 7월 평양서 北 관료에 행정교육(5/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비정부기구(NGO)가 오는 7월 평양에서 북한 관료들에게 선진 행정을 교육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은 RFA에 "북한 관료들에게 지방도시에 대한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을 가르치는



-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힌.
- **국제사회, 북송 탈북청소년 '안전보장' 요구(종합2보)(5/31, 연합뉴스)**
 - 국제사회는 최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강제송환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北 주재 스웨덴대사관, 수감중인 케네스 배 면담(5/31,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 '특별교화소'(교도소)에 있는 한 국제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만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전함.
 - VOA는 스웨덴 대사관 측과 배 씨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리는 특별교화소가 어떤 시설인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힘.

 - **유엔, 탈북청소년 북한 강제송환 확인(종합)(5/31, 연합뉴스)**
 -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1일(현지시간)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제네바 유엔본부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출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5명의 미성년자를 비롯 대부분 20대 초반 이하의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WFP, 北 관리들과 함흥서 식량문제 연수회(6/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북한 관리들과 함께 식량문제를 주제로 연수회를 진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전함.
 -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함경남도 함흥에서 열린 연수회에는 디르크 슈테겐 WFP 북한사무소장과 WFP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공장의 북한인 관리자, 북한 당국자 등 72명이 참가함.

 - **北매체, 김정일 첫 방중 상기...'북중친선' 강조(6/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



던 1983년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찾은 사실을 소개하며 북중 친선을 강조함.

- 신문은 30년 전 이날 있던 김정일 위원장의 첫 방중을 다룬 '대지에 차 넘친 절세위인에 대한 흥미심과 친선의 정'이라는 글에서 김 위원장이 "조중(북중) 친선의 의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중국땅에 불멸의 자욱을 새겼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첫 방중 30돌 맞아 '북중친선' 연일 강조(종합)(6/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1면 머리에 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중 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이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것은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사설은 김 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오늘에 이르는 30년의 역사는 조중 친선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친선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며 북중 친선의 강화·발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강조함.

나. 6자회담(북핵)

● **北, 선제적 비핵화 불가 입장 재천명(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은 위협과 도발론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북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전쟁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국가의 최고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방패"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보장이 실현되려면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핵보유 또 강조... "핵보검 틀어질 것"(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1면을 통틀어 1만2천여자에 달하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고귀한 핵보검을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논설은 "우리나라(북한)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의 본거지도 무자비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된 것은 우리가 반제대결전을 총결산할 수 있는 근본열쇠를 쥐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최후승리는 강력한 핵무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전함.
- 논설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않거나 핵보유를 지향하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



에 못 이겨 그것을 포기한 결과 침략의 희생물이 된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며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간접적으로 거론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北)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北核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선제적 비핵화 不可'를 再次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對北적대시정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5.28, 중통·노동신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정전협정 파기, 평화협정 체결" 공세(5/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조선반도의 정전체제 유지책동은 반공화국 전쟁기도의 산물'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없다"라며 "조선전쟁의 유물인 정전체제는 하루빨리 공고한 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됐더라면 비핵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전협정으로 완전한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미국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흥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6·15북측위 "내달 3일 개성서 실무접촉하자"(5/30,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는 다음달 3일 개성에서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남측위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남측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위의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북측위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으며, 북측위는 이번 답신에서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남측 대표단의 통행과 통신, 신변안전 등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확인함.
- 北 "6·15공동행사 열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것"(5/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민족공동의 선언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공동행사 등을 통해 혈연의 정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운운하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도 자연히 풀리게 돼있다"고 밝힘.



- 통신은 "천리 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고 지난 5년간의 최악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데 그 무슨 방식과 격을 따로 정하고 시야비아한다면 민족의 백년대계는 오늘의 시점에서 또다시 멈춰서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기업인 방북시 개성공단 정상화협의 가능"(5/28, 연합뉴스)

-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의사를 표시하며 이들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뜻을 있음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기업가들의 방문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제품반출 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차대통령 '당국대화' 강조에 "우리 성의 목살"(6/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의 성의를 목살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라고 전함.
-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무엇을 보여주었나'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공명정대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北매체 "통일장관, 개성공단 사태 오도" 비난(6/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을 오도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매도하고 있다고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류 장관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민간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 전도의 파렴치한 궤변이고 생억지"라고 주장함.
- 논평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재개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남조선 기업가들의 공업지구 방문을 허용하고 제품반출을 승인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모든 성의를 다 보였"다"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북한의 제의를 '위선', '남남갈등'이라고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단"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韓美 당국이 北인권문제를 날조하여 여론화하며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체제를 중상모독하며 북침의 흥계를 꾸미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5.27, 중통·노동신문)
- 北, 우리 軍의 '태극연습(5.29~31) 훈련' 예정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5.28, 중통·중방)
- [중통 논평]대통령의 '北 병진노선' 지적(새로운 도박·성공不可,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접견時)에 대해 "동족대결과 남북관계 파탄의 길로 나가기로 작심한 것"이라고 비난 지속(5.29, 중통)
- [중통 논평]北, 6.15공동행사 제의'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기자회견(진정성 의심, 남남갈등 조장,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 민족의 대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왜곡 비난(5.30,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일본, 6자회담 재개에 새 장애물로 등장">(5/28, 연합뉴스)

- 지나 5년 간 중단돼 온 북핵 6자 회담이 북한의 대화 재개 의사 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회담의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27일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에 따르면 6자 회담 당사국들인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모두 일본의 6자 회담 참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관측됨.
- 이 국가들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에 일제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음.
- 북한은 지난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참여를 반대해 온데 이어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죄행을 사과하고 이같이 엄중한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뒤웨이는 전했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도 지난 26일 독일 방문 기간 포츠담 회담 사적지를 찾은 기회를 이용해 일본이 도둑질해간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
-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총리 자문역인 이자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를 전격적으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항의를 받고 미국의 반발을 샀음.
- 당사국 간의 화해 무드 속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 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해 회담 재개가 관건인 시기에 일본이 '공공의 적'으로 변모했다는 증거들임.
- 이런 이유들 외에 일본은 6자 회담에서 자국인 남북 문제에만 집중하고 주 의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일본을 6자 회담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6자 회담에 적극 끌어 들인 미국도 일본의 역할에 회의적이란 시각이 있다고 뒤웨이는 전했다.
- 지난 10년 간 일본의 국력이 쇠퇴해 균형자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고 막 후 자금줄 역할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이 사전 상의없이 자국의 남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를 북한에 전격 파견하자 일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진단
-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갈등 고조로 인해 일



본과 자리를 함께 하며 회담을 하기 어려운 국면임.

- 또 북한은 자체적으로 반일 감정이 심한 가운데 중-일 갈등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대일 압박 강도를 높일 수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뒤웨이는 덧붙였다.

● <러시아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놓치지 말아야">(5/31, 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와 함께 조성된 6자회담 재개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했음.
- 3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틀 전 "한반도 상황이 참여한 국면을 넘긴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어도 북한은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정치적 선전 국면으로 이행했다"고 평가했음.
- 대통령 산하의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한 국방안보 분야 최고 자문기구임.
- 이 기구의 책임자인 파트루세프 서기는 "물론 내일 북한이 태도를 180도 바꿔 호전적 수사를 쏟아낼지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도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협상을 위한 논의의 틀로 여전히 6자회담의 유용성을 주장하고 있음.

● <한미일 국방장관 "北, 모든 핵무기 폐기해야">(6/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은 1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그같이 의견을 모았음.
- 3국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개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또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소말리아 대(對)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협력, 탐색구조 훈련, 비확산 정책 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한·미·일은 매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으며, 이번이 네 번째 회담임.



나. 미·북 관계

- <“北, 핵 능력 갖춘 순항미사일 개발 중”>(美전문가)>(5/30,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크루즈미사일(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핵 전문가인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스텐센 연구원이 주장했다.
 -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FAS의 전략 안보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미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AFGSC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 핵 보유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8개 나라의 핵 전력 현대화 진행상황을 엿볼 수 있는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으며, 이 브리핑 자료에는 중국과 북한의 신형 핵 관련 무기 개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지적했다.
 - 그는 중국이 개발하는 신형 순항미사일은 CJ-20 공대공 순항미사일로, 중국인민해방군 중거리 전략 폭격기인 H-6를 통해 운반되며,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은 KN-09 해안 방어용 순항미사일(KN-09 CDCM)이라고 말했다.
 - 이들 신형 순항 미사일은 아시아 지역의 핵전력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지적했다.
 - 이와 함께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AFGSC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핵전력 현대화를 위한 북한의 신형 무기로, KN-09 CDCM 이외에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KN-08 ICBM),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IRBM), TD-2 우주발사체(SLV)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핵탄두 등 5가지를 꼽았다.
 - 특히 AFGSC가 KN-09 미사일을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분류한 점이 놀랄 만하다고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강조했다.
 - KN-09 미사일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MBC가 지난 4월 사거리 100~120km의 미사일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MBC는 KN-09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지만, AFGSC는 이 미사일을 해안방어용 순항미사일(CDCM)로 분류하고 있다고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전했다.
 - AFGSC의 브리핑 자료는 북한이 앞으로 5년 이내에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첫 번째 무기화된 핵탄두 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핵탄두 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크리스텐센 연구원은 덧붙였다.
 - 한편, AFGSC는 미국의 핵무기 전력의 핵심인 B-52H 전략폭격기와 B-2A 전략폭격기, LGM-30G(미니트맨 III)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총괄하는 사령부로, 2009년 창설



- <미국, 북한 도발위협에도 테러지원국 또 제외>(5/3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올 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단 전쟁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2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난 2008년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던 북한은 올해까지 5년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내용
 - 또 지난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과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과 일본이 이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올들어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음.
 - 특히,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전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음.
 -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또다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테러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과 테러 대응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음.
 -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혹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통해 테러활동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테러활동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활발했다"면서 지난해 7월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테러공격 연루 의혹을 제기했음.
 - 또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등 지도부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괴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 "북한, 9·19 비핵화 공동성명 이행해야">(5/31,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비핵화 선언을 이행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6자 회담 재개 여부나 전제 조건을 묻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 스키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도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있다"며 "북한은 6자 회담과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게 그들이 취해야 할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몇 주 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이들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필요한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언급은 남북한이 합의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대화나 협상 등이 가능하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다. 중·북 관계

- <북, 정전협정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 참석 요청>(5/29, 연합뉴스)
 -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방중 당시 중국 최고지도부에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7월27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중국 측이 즉답을 피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복수의 베이징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측이 참석을 요청한 최고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가리킨다"며 "중국 매체는 최룡해가 방중 시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기념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부를 참석시켜 한·미·일 등의 압력에 대항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식량 원조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향후 기념식 참석 여부를 수단 삼아 북한에 대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을 '조국해방전쟁 승리'라고 주장하며 매년 대대적인 기념식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적(한·미)보다 성대하게 60주년을 축하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군사행진 등 대대적인 행사 계획을 세우고 중국 등에 고위 관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신문은 또 최룡해가 지난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자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사실은 '6자회담 틀 속에서 (미국·일본 등과) 양자, 3자 회담을 열자는 의미'라고 풀이했음. 6자회담의 본래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미국과의 핵 군축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 신문은 또 중국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부전(不戰), 불란(不亂), 불통(不統·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반대), 무핵(無核)이라는 이른바 '3불1무(三不一無) 정책'을 취해온 것과 관련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정책의 중점이 '3불'에서 '1무'로 변했다는 분석을 함께 실었음.

라. 일·북 관계

- <북,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 '제3국 상봉' 제안>(5/29,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의 대표적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딸을 일본 외의 제3국에 보내 일본인 조부모와 만나게 하는 방안을 타진한 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등은 2010년 5월 방북한 일본 민주당의 가와카미 요시히로 참의원 의원에게 요코타 메구미의 딸 김은경씨를 제3국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음. 김은경씨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음.
 - 교도통신은 북측이 최근에도 "김은경씨에 대한 입장은 일관돼있다"고 말하고 있고, 김영일 부장이 지난 15일 방북한 이치마 이사오 일본 내각 관방 참여(자문역)를 만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은경씨의 제3국 출국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음.
 - 북측의 제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요코타 메구미가 일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이라는 점에서임.
 - 북한은 2002년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데 이어 2004년에는 요코타 메구미가 숨졌다며 유골을 북한에 보냈지만, 일본측은 그럴 리 없다며 재조사와 생환을 요구하고 있음.
 - 북측은 북·일 교섭의 최대 걸림돌을 요코타 메구미 문제라고 보고 일본인 부모와 김은경씨의 제3국 상봉을 주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 측은 '북한이 김은경씨를 내세워 요코타 메구미가 숨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납치문제의 종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강해서 제3국 상봉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임.
- <北, 일본판 NSC 창설 시도 비난...>"한반도 재침 야망">(5/29,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정부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일본이 미국을 본떠 저들식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라며 "일본 당국자들은 NSC를 내오려는 이유에 대해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갓 기만"이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일본 당국이 NSC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논의하고 결정해 한반도 재침야망을 이루려고 한다며 일본의 NSC 창설 시도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음.
 - 이어 앞으로 일본판 NSC가 창설되면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위한 모든 정책이 여기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 무력이 NSC의 결정



으로 군사작전권을 발동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은 일본의 정책적 목표이고 전략"이라며 아베 정권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이에 극성이라고 강조했다.
- 아베 정권은 지난 1월 발생한 알제리 인질 사건과 중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대응할 때 정보 수집·분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NSC를 모델로 한 일본판 NSC 창설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내에 NSC 창설법안을 제출할 계획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내달 열린다…신경전 재연될 듯>(5/28, 연합뉴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협상이 내달 말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 현지 외교소식통은 28일(현지시간)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비 분담협상이 내달말 열리게 되며, 향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음.
- 한국 측에서는 황준국 방위비협상 전담대사가 수석대표로 이번 협상을 이끌게 되고 미국 측에서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미국 측 수석대표에는 에릭 존 미국 공군참모총장 외교정책고문이 내정된 상태
- 이 소식통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고문으로 임명된 뒤 방위비 분담협상에 나섰던 토머스 도튼 현 미국 수석대표가 곧 물러나면 존 고문이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내달 첫 협상 때도 존 고문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존 고문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을 지내 한국 사정에 밝음.
- 이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임.
-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SMA를 체결해왔으며, 한국은 2008년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연평균 8천억 원 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음.
-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일 때마다 한국 측의 분담비율 상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음.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이에 따라 2년간 시한을 연장해놓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韓美, 용산기지 기름 오염 내부조사 첫 논의>(5/31, 연합뉴스)

- 주한미군이 환경부·서울시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오염문제와 관련, 기지 내부조사를 할 지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함.
- 31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열리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간 환경분과위원회의 의제로 반환기지 문제와 더불어 기지 내부조사 건(件)을 채택. 주한미군 측은 이 회의에 서울시 토양지하수과에도 참석을 요청했음.
- 서울시는 그동안 용산 기지 안팎의 기름 유출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기지 내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음.
- 2001년 녹사평역 부근에서 기름유출이 첫 확인 되고 나서도 유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땀질처방만 이뤄져 왔다는 지적임.
-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녹사평역 주변과 캠프킴(Camp Kim) 대지 면적은 최소 1만2천 235㎡(3천700평)에 달하고 지하수도 7천178㎡(718만ℓ)가량 오염된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녹사평역 부근의 벤젠 검출량은 평균 1.537mg/ℓ 로 기준치인 0.015mg/ℓ 를 10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 최대수치는 19.671mg/ℓ 로 기준치의 1천311배를 기록하기도 했음.
- 캠프킴의 경우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농도는 2008년 정화 이후 계속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1.5mg/ℓ)의 50배, 최대 농도는 966배를 기록했음.
- 서울시는 녹사평역 부근 기름오염이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기지 담장 밖에 양수정을 설치해 정화작업을 하는 등 58억 원의 비용을 들였으나 오염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 오염 규모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용산 기지 내부조사를 요청해왔음.
- 시는 특히 환경부에는 한미 간 기름유출 관련 공식 논의 채널을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주한 미국대사관에는 기지 내부조사 허용을 줄기차게 압박해왔음.
-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협조 없이는 내부 조사가 불가능. 따라서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기지 내부 조사가 실시될 지 주목됨.
- 서울시는 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와 함께 용산기지 방문 조사를 요청하고 정화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원자력 기술이전 각서 곧체결...파이로 연구 탄력>(5/31,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를 본격화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기술이전 관련 정부 보증



- 교환 각서' 문안을 확정하고 곧 체결함.
- 외교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환 각서 문안 확정을 위한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미국과 각서 교환 절차를 통해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교환 각서는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 이전하는 특정 기술을 다루는 방안을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 이전 기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조치 △ 이전 기술을 제3국으로 재이전할 경우 상대국의 동의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10년을 시한으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기술 이전 교환 각서 체결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
 -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 연구 2단계부터는 미국과 우리가 가진 중요한 원자력 기술이 서로 교환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교환 각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에 앞서 기술이전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정 원자력협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 원자력협정(2016년 만기) 개정 협상 시한이 공동 연구 시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이번 기술이전 교환각서 체결로 연구가 탄력을 받으면 개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한미 양국은 지난달 재처리 및 우리농 농축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뒤로 미루고 협정 개정을 위해 계속 협상하기로 했음.
 - 양국은 협정 만기 연장합의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3~4일 서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
- <김관진 "연합지휘체제 유지 한미간 공감">(6/1,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한미간) 상호 공감은 있다"고 밝혔음.
 -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참가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는 복잡하고 군사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그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때까지) 계속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견해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다"면서도 그 문



- 제가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한미 군 당국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는데 공감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상그릴라호텔에서 가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오늘은 상견례 자리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공감했다"고 밝혔음.
 - 그는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지휘구조 문제를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만남에서 전작권 문제는 언급할만한 의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실무적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조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한다"며 "정치와 군사 문제는 분리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다만 그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며 "우리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 과거 거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靑 "대통령 방중, 한중FTA 이견 좁히는 계기 희망">(5/28, 연합뉴스)
 - 청와대는 내달 하순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비해 중국 방문에서 경제분야의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 같아서는 미국에서 했던 그런 공동선언 등 구체적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국이 현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쪽에서 조금 구체적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조 수석은 한중 FTA에 대해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걸 논의 중"이라면서 "한중 FTA의 방향이나 범위나 깊이 등에 대해 양측이 컨센서스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해 의견 차이가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 한중 FTA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먼저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이미 FTA를 하고 있고 TPP에 참여중인 국가들과도 FTA를 논의 중이어서 사실은 TPP를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가 얻을 추가적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의 FTA보다는 중국과 우선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외교 등을 떠나 TPP의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 보면 TPP를 통해 기대하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한중FTA를 통해 기대하는 무역투자 확대나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 수석은 이어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한중 FTA에 더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하는게 우리 경제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한중 FTA의 결과물이 상품분야에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고, 투자나 서비스까지 포함돼야 얻을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 <한·중, 내달말 정상 공동성명에 비핵화원칙 명기>(5/30, 연합뉴스)

-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 달 하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재 공동성명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30일 "북핵 문제는 공동성명 문안의 중요한 파트"라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 정부는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 포기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포기 문제를 분명하게 포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핵 문제에 대한 문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서 나아가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천명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됨.
-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문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임.
- 2005년 11월 채택된 한중 정상 공동성명에도 '비핵화' 표현은 들어가 있음. 그러나 당시에는 9·19 공동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으로만 포함됐음.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채택된 2008년 5월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북한의 9.19 공동성명 전면이행을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음.
- 다만 공동성명의 경우 한중 양국의 미래 비전을 담는 차원이므로 성명



자체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 원칙 이상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럴 경우 정상회담 의제로 양국 정상이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에 '비핵'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됨.
- 다른 정부 소식통은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문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朴대통령, 방중때 탈북자 복송문제 거론할까>(5/30,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복송 문제를 공식 거론할지 주목됨.
-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이동한 탈북 고아 9명이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해 지난 28일 평양으로 강제 복송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탈북자 복송문제가 다시 한 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음.
-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방문 기간 현지에서 행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또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중단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한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음.
- 권영세 신임 주중 대사도 지난 29일 언론인터뷰에서 "탈북자 이슈는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도 "중국 측에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처우를 받는지 충분히 설득하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강력히 요청해 양국 간 원만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 대사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음.
-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신중한 입장. 사안의 민감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임.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국 외교당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이라면서 "의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한중간 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좋다"면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음.
- 탈북자 복송 문제는 북중 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중국에 구체적 답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관측임.
- 실제 정부 내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을 전광석화처럼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놓고 한중 간에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틈을 벌리려는



-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처리 문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는 공개석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중국 지도부에 메시지 전달을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북한에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탈북 주민이 중국도 가입된 '국제연합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가 대다수 세계시민이 원하는 인도적 요구에 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요청한 바 있음.
- <김관진 "중의 대북제재 이행·北비핵화 촉구에 감사">(6/1, 연합뉴스)
-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치젠궈(戚建國) 중국 인민군 부총참모장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현안 등을 논의했음.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가진 면담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와 여러 가지 공조적인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충분히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한 중국 측의 여러 가지 대화 노력과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한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치젠궈 부총참모장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화답했음.
 - 김 장관과 치 부총참모장은 이후 비공개로 20분간 면담을 가졌음. 이번 중국 대표단과의 면담은 당초 일정에 없었으나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면담은 북한 김정은 특사로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이뤄진 첫 한중 양국 간 군사부문 고위급 접촉임.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다. 한·일 관계

- <이병기 신임 주일대사 "한일 신뢰프로세스도 필요">(5/30, 연합뉴스)
- 이병기 신임 주일대사는 30일 "남북 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이 돼야 신뢰가 생긴다"고 밝혔음.
 - 다음 달 4일 부임하는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사로 나가서 어떤 것부터 해서 한일관계를 단계적으로 안정화할지 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이 대사는 "어떻게 하면 저 사



- 람들의 역사 인식을 제대로 만들어줄까 고민"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최근 과거사와 관련된 일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지만 여러 뜻이 있지 않겠느냐. 7월 선거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라면서 "이런 것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 이어 "길게 보면 일본을 떼고 우리가 살 수 없고 한국 없는 일본도 있을 수 없다"면서 "큰 배가 미래를 향해 가야 하는 상황에 지금 암초를 만나 기우뚱하고 있는데 다시 이 배가 편안하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그는 "대사는 바른 소리만 하면 된다"면서 "일본 국민의 양식을 믿고 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 "과거에는 지도층끼리는 잘 통했고 젊은 층끼리는 안 통했는데 요새는 지도층은 안 통하고 국민은 서로 통한다"면서 지도층과 일반 국민 모두 잘 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이 대사는 한일 정치인 간의 교류와 관련, "일본은 내각제로 우리가 정치인을 상대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카운터파트로 정치인이 더 좋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한일 의원연맹 등을 빨리 복원해서 정치인 간의 대화를 해야 갈등이 덜 생길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대사는 한일 고위급 교류에 대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자주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역사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영영 안 할 것도 아니고 고위급 교류는 풀어나갈 문제"라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 <헤이글 미국방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 도움 기대">(6/1,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헤이글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 "최근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 시도로 주변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위험한 도발로부터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음.
 - 헤이글 장관은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국가도 평상시(business as usual)처럼 처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중국 해커들의 군사정보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군을 겨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음.
 - 그는 "미국은 점점 커지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해 왔으며 그 위협의 일부는 중국 정부와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고 해킹의



- 혹을 부인한 중국 정부를 비판
- 이어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바꿨음.
 - 헤이글 장관은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강압적인 시도는 무엇이든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음.
 - 그는 이밖에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오랜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 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토대로 입장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美하원외교위원장, 시진핑에 탈북자 복송 항의서한>(6/1,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복송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공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강제 송환에 대한 대안을 찾아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 그는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이송된 직후 북한으로 보내진 것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암울한 운명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을 즉각 복송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대북 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등 금융제재에 나선 것에 고무됐다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협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
 -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은 회원들에게 이번 탈북자 복송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북한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촉구. AI는 이 사실을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박선영 전 의원에게 이메일로 알렸음.
- <'미·중, '해킹' 놓고 정례고위급 회의 연다'< IHT)>(6/2, 연합뉴스)
- 미·중 양국이 최근 불거진 중국 해커들의 군사정보 해킹의혹을 비롯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고위급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보도
 -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양국간 사이버 안보 정례 회의는 오는 7월 전략경제대화(SED)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현재 회의준비를 위해 새로운 실무그룹을 구성 중임.
 -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스파이와 군사정보 해킹 등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기준과 대응방안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 행위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해킹 관련 문제는) 단순한 논란거리로 다뤄져서



- 는 안 되는 심각한 이슈"라고 말했다.
- 그는 특히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놓겠다"며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당장 중국으로부터의 해킹 위협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어 근원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킹과 같은 사이버 안보관련 문제는 미·중 양국 모두에 낮은 의제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오는 7일 열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사이버 안보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킹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관계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첫 번째 노력에 나섰다.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의가 있다고 IHT는 분석했다.
 - 앞서 중국은 최근 중국 해커들의 공격으로 미국의 무기 설계도 등 군사 정보가 유출됐으며 중국 정부와 군이 그 배후로 의심된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에 대해 '우리는 해킹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전면 부인했다.
 - 이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 위협 증가에 우려의 뜻을 표시해왔으며 그 위협의 일부는 중국 정부,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고 비판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둘러싸고 양국이 신경전을 고조돼왔다.

마. 미·일 관계

- <미국 국무부, 하시모토에 불쾌감 여과없이 표현>(5/29,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최근 잇단 망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여과없이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시모토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전 세계의 지방관료 하나하나가 이상하고, 불쾌하고, 비난받을 발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대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하시모토 시장에 대해 "이 사람은 지방관료일 뿐"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밝힐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그러면서 "국가적인 인물의 나쁜 발언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지방관료가 있는데 하나 하나 대꾸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미 쟈 스키 대변인이 최근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언어도단이며 불쾌하다"고 비판한 만큼 추가 언급을 피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 벤트렐 부대변인은 또 하시모토 시장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미국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 관료의 동선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일본 동맹은 굳건하다"고만 말했다.
- 그는 이밖에 '미군이 주둔한 오키나와 시장이 문제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음.
- 한편,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25일 한 TV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 주둔 미군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풍속업(매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음.

바. 미·러 관계

- <미국·독일 "러시아, 시리아정권 무기 판매 안돼">6/1, 연합뉴스)
 -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에 시리아 정부군에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내전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나서 "러시아의 무기 공급은 시리아 사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것이 오래전에 성사된 계약이건 아니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해와 안정의 균형을 깨트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음.
 - 베스터벨레 장관도 러시아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경고했음.
 - 러시아는 시리아와 2010년 10억달러 상당의 전투기 및 크루즈 미사일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인 S-300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이 무기가 실제 인도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다오위다오는 중국땅" 리커창 발언 놓고 중·일 공방>(5/29,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의 반환을 촉구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의 포츠담 회담 사적지를 찾아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음.
 -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 26일 제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부들이 모여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회의로, 당시 참가국들은 일본의 항복과 점령지 반환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 리 총리는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빼앗은 중국 동북지역과 대만 등의 도서를 돌려줘야 한다"며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성과를 휘



- 손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역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한 면의 거울과 같다"며 "역사를 바로 볼 때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음.
 -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즉각 반박 논평을 내놓았음. 스가 장관은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역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면서 "센카쿠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 그러자 중국 정부가 다시 스가 장관을 비난하고 나섰다.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대만과 그 부속도서를 불법적으로 점거했다"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는 상식이 결여된 이 같은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강탈한 중국 영토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규정한 카이로선언(1943년)의 조건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스가 장관을 겨냥,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때냐"라며 '도발'했음.
 - 그러자 스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센카쿠 열도는 포츠담 선언 이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며 "역사를 확실히 공부하고 발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음. 그는 이어 왕 부장의 발언은 "역사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청일강화조약(1895년) 체결 이전부터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 <일본-인도 '중국 견제용' 합동 해상훈련 강화키로>(5/30, 연합뉴스)
- 일본과 인도 총리가 도쿄에서 만나 손을 마주 잡고 중국을 향해 견제 메시지를 보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한 원자력협정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
 - 두 총리는 또 일본의 비행정을 인도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 양국의 원자력협정 교섭은 인도가 2020년까지 원자로 18기를 건설할 예정이고, 일본은 관련 기술과 물자를 수출하길 원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일본은 애초 인도가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지만 원자로 수출을 의식해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이 점을 의식해 "인도의 핵 비확산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고, 싱 총리는 인도가 자율적으로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양국은 또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인



- 도 해군의 공동 훈련을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음.
-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의 비행정 'US-2'기를 인도에 수출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할 실무팀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음.
- 일본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행정의 피아 식별 장치 등은 떼어내고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뭄바이의 지하철 건설과 인도 공과대 정비 등에 1천17억 엔(1조2천억 원)의 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싱 총리는 일본의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음.
- 다만 인도는 뭄바이-아마다바드 고속철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일본과 공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을 뿐 일본 신칸센(新幹線)을 채용하겠다고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총리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아키히토(明仁) 천황 부부의 인도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음.
- 아베 총리는 공동 회견에서 "(1차 아베 내각 시대에 구축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에 근거해 일본-인도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싱 총리는 "양국은 인도 국내의 인프라 정비에서 협력을 계속하고 무역과 민간 투자의 흐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 일·러 관계

- <일본-러시아, 오호츠크해 유전 공동 개발키로>(5/29,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오호츠크해의 해저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음.
 - 일본 회사인 국제석유개발테이세키(INPEX)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티는 29일 공동 개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임.
 - 개발 대상은 러시아 극동 마가단시 앞바다 50~150km에 펼쳐진 '마가단 2,' '마가단 3'광구. 유전은 수심 200m 이내 대륙붕에 있음.
 - 원유 매장량은 '마가단 2' 광구가 약 24.5억 배럴, '마가단 3' 광구가 약 9.5억 배럴로 추정됨. 일본의 연간 원유 수입량(약 12억 배럴)으로 환산하면 약 3년분에 해당함.
 - 일본은 채굴 권리의 3분의 1을 취득함. 양국은 2017년부터 구체적인 채굴 장소를 찾아내기 위한 시험 채광을 한 뒤 2020년대 후반에 본격적인 채굴을 할 예정임.
 - 일본 정부도 전면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우선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시험 채광 비용의 50~75%를 부담하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본격적인 채굴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극동 에너지 공동 개발에 합의했음. 양국은 이전에도 오호츠크해 '사할린1,' '사할린 2' 광구를 공동 개발한



목적임을 신중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그 밖에 NDPG를 위한 자민당의 권고안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사이버보안 강화, 자위대 내에 미 해병대와 유사한 능력을 갖춘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